

韓·美 電子通商問題의 現況과 展望

1987년은 한·미 전자 무역부문에서는 매우 활기찬 한해였다. 전자 제품의 양국 교역은 상당히 확대되었고 전자제품 수입에 대한 한국의 자율화 조치는 꾸준히 계속되었으며 이것은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동시에 '87년은 한국기업에 대한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가—특히 337條와 關聯한— 취해졌던 한해이기도 하였다. 이에 本會 顧問辯護士인 Mr. Olin L. Wethington 이 보내온 특별 보고 내용을 掲載하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參考를 바란다. <編輯者 註>

1. 개 요

한국에 대한 GSP 공여문제가 새로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간의 무역 협상의 주요 의제는 미국 전자제품의 한국시장 진출, 지적소유권 문제, 국내 물품 의무 사용 규정에 관한 허가와 關稅 賦課 문제들이다.

통신기기 시장개방에 대한 협의는 이미 始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이러한 쌍방간의 무역 회담이 미국에서는 건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의 협상은 지난 무역협상('84-86)에서 보여주었던 대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1988년 전망에 관하여는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미국정부의 대한 무역 關係에 대한 보다 깊은 關心이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 USTR의 아이터 대사는 이 점에 대하여 이미 공식적으로 시사하였다.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換率問題가 가장 중요한 懸案으로 부각될 것이다.

덧붙여서, 1988년은 미국의 선거의 해이고 의회는 一括通商法案을 거의 확실히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양국간에는 보다 높은 강도의 파고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GSP 졸업에 대한 미국의 결정, 337條 調査의 繼續, 새로운 提訴 가능성 등으로 더욱 심각한 긴장이 조성될 것 같으며 이러한 현실은 원화의 평가 절상이 계속되고 미국의 국내 경제가 정체된다면 더욱 深化될 것이다.

2. 1987년 주요 현안 검토

가. 한·미 전자 무역, 刮目할만한 성장 기록
미 상무성은 한국 전자제품 수입은 '87년에 25~30%의 增加를 보였다고 추산했으며 이 성장은 미국 소비자의 한국 전자제품에 대한 강한 選好로 더욱 鼓舞되었다.

한국 전자제품은 비슷한 외국 수입품보다 高品質의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認識하고 있다. 한국 전자 交易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분위기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換率 惠沢으로 한국 기업에 많은 잇점을 提供하고 있음.
- 미국 무역 관리들을 전자 交易에서의 한국 무역 黒字 注視中
- 미국 무역 赤字의 急激한 增加는 한국을 包含한 아시아 NICS와의 交易에 起因하고

있다는 시각임.

동시에 단시간에 적자해소를 위한 이러한 保護主義的 해결책에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

- 현재 行政政府의 태도는 대한 수입을 상쇄키 위한 대한 수출 擴大를 고취하려는 것임.
- 1987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상호 시장 개방의 강조와 한국 시장 개방 압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나. 한국의 지속적인 전자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의 壓力

- 1987년 미국정부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한국 시장개방의 促進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 1987년 政府間 무역 협상은 直接的이고 솔직한 분위기였으며 과거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 한국의 국내 大統領 選舉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批判을 자제하여 왔다.
- 미 행정부 관리는 현시점에서의 과도한 壓力은 미국의 利益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다.

다. 一 括通商法案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87년 후반에 정체 상태

- 1987년 미 의회는 包括的 通商法의 통과를 위한 상당한 진전을 보았음.
- 一 括通商法案으로 지칭되는 이 법안은 미 通商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 변화의 많은 부분은 保護貿易主義的 方向이며 레이건 행정부는 가장 論難 많은 改定案에 분투해 왔다.
- 下院은 1987년 5월 下院案을 통과시켰으며 上院은 7월 上院案을 성안 완료하여 兩案의 차이 해소를 위하여 “調整委員會”에 회부하였다. 調整委員會는 17개 小委員會의 199名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1987년초 兩院 指導者들의 목표는 1987년 안에 本法案을 完了하는 것이었는데 상당한 정도로 빗나갔다. 이 遲延에는 2 가지 요인이 있는데 兩院의 무역위원회가 미국에 산 赤字 減縮 노력으로 탈진한 상태여서 그

들의 관심이 貿易立法에서 分散되었다. 두 번째로는 양측 법안의 複合性과 差異点으로 調整委員會가 특정 조항에는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 행정부의 입장은 비보호주의적 법안의 성안을 위하여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었다. 행정부 자체는 보호주의적 조항에는 반대하나 GATT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의 협상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같은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의회는 2개의 막중한 무역법안을 만들어내었으나 종합적 무역안창출 능력을 보이지 못한 채 '87년을 끝냈다.
- 통상법안중 한·미 전자무역에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조항은 하기와 같다.

1) 게파르트 수정안

게파르트 수정안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과도한 무역 흑자를 내거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매년 10%의 무역흑자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본 수정안은 적자감소를 위한 강제적 제재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정의에 의하면 한국은 과도한 무역 흑자국으로 간주될 것 같으며 강제적 제재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규정 단독으로도 대통령이 비토권 발동에 충분한 요인이 된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송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나 게파르트 수정안이 완화된다면 대통령의 게파르트 조항의 절충적(그러나 보호주의는 잔재) 거부권을 반송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지가 의회내에 있을 수 있다.

2) 201조 개정(긴급구제조항)

법적으로 “긴급구제” 조항으로 알려진 201조는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입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역시 대통령이 이 규정에 따른 권한 행사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하원 법안의 조항은 201조항의 대통령 권한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본 조항의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반덤핑 관세법 수정

상하원은 행정부가 반대하는 미국 반덤핑법의

여러개의 보호주의 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한국 업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가) Private Right of Action (私的 訴訟權)

이 조항은 외국회사들이 반덤핑 명령을 받는 경우 미국 회사들의 재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허용한다. 이것은 미국 반덤핑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는 외국 회사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GATT의 처벌 대상이 된다.

나) Diversionary Dumping (우회 덤핑)

하원안은 소위 "우회덤핑"이나 다른 덤핑 명령에 의한 부품이나 제품의 덤핑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반덤핑법의 範圍를 과격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GAT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 수출자 판매가격 규정

상원안은 소위 수출자 판매가격거래라는 반덤핑 행위 당사자의 거래처리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인 개정으로 보이지만, 외국관련 당사자에게는 심한 정도의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상원조항은 상무성이 미국 판매가격으로부터 이익과 직접 판매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외시장 가격 산출의 조정은 인정치 않고 있어 인위적인 덤핑 마진을 남겨 한다.

라) 337조 개정

상하원 법안은 337조 조사의 피해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제조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낮추어진 기준은 337조를 통한 파상적 공세를 고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 통신조항

상하원 양 법안은 외국이 미국 통신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쟁기회를 부여치 않을 경우에 대통령에 의한 의무적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통신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이 법안의 입안자들은 유럽과 일본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한미 통신분야의 교역은 워싱턴에서 점증하는 경계를 받고 있다.

미국 무역관리들은 한국 회사들이 1987년 6개월간 미국시장에서 약 2억2,000만불의 통신기기를 판매하여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행한 3,000만불의 미국 통신제품의 판매와 비교된다.

라. 한국에 대한 GSP 공여에 관한 논란

1987년 중간 시점에서 미국의 무역 관련기구는 USTR의 주도하에 한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 수입을 포함한 몇가지 수입품에 대하여 GSP를 계속 공여하거나 중단에 관한 신청에 대한 연례 검토를 시작했다.

한미 전자 무역에 관련하여 3가지 신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i) Vodavi Technology社에 의한 單線과 複線전화기

ii) 맥슨전자에 의한 무선전화기

iii) 모토로라에 의한 셀룰러 텔레폰과 부품

이중 2가지만 검토 대상으로 허가되었는데 모토로라와 맥슨의 신청건이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조사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무역 관련부서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시사하고 있지는 않다.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은 통상적인 과정상 1988. 4. 1까지 공표될 것이다.

그러나 1987년 가을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GSP 혜택을 받고 있는 6개국의 신흥공업 국가를 졸업시킴으로써 이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무면세 혜택을 철폐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검토기 시작했다. 한국 외에도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도 고려되고 있다.

'87년 10월 본 검토가 여론에 알려지게 되었다. 증권시장의 위기적 상황은 어느 정도 이러한 시도를 늦추게 한 것 같으나 이러한 국가들의 GSP 졸업 문제는 다시 논의될 것이다.

GSP 졸업과 관련한 이러한 노력은 USTR, 재무성, 상무성, 국무성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인상이다.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이 국가들을 1988년에 졸업시키는데 비공식적인 합의를 본 가운데 '87년을 마쳤으나 아직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마, Harmonized Tariff 분류 제도 채택의 지연

다른 국가와 함께 미국은 세번 분류제도를 통일시키는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Harmonized Tariff Code"라는 다자간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1987년말까지 HS에 관한 관련법을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다.

미 세관 당국은 이미 새로운 제도로의 변경 작업을 준비완료했으며 수입업자들에게 1988년 1월부터는 새로운 세번 분류제도를 이용, 수입선적서류를 작성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HS의 채택이 1987년에 통과되지 못하는 일괄통상법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HS 조항을 '87년말까지 법률화 시키기 위하여 독자적 법안이나 다른 의무 입법안으로의 개정 함으로서 분리시키려는 세찬 노력이 '87년말에 있었다.

상원 재무위원장이며 일괄 통상법안의 상원안 입법 위원장인 벤슨 상원의원은 HS 조항의 분리 노력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HS는 '88. 1. 1 발효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혼란과 추가비용이 미국 내 수입에서 파생될 것이다.

바. 새로운 제조 사안들 : 337조에의 취약성

한국 전자회사를 대상으로 1987년에는 몇 건이 새롭게 추가로 제조되었다. 통상 제조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은 한국 회사들에게 통상 규제의 한 방법으로 337조의 이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Texas Instrument사의 반도체 DRAM에 관련한 337조 승리는 '87년 통상 현안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T. I.의 성공은 기타 한국 제품에 대한 337조 제조를 고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337조는 관세가 부과되는 반덤핑 경우와는 달리 "불공정" 수입의 완전한 배제를 허용하기 때

문에 특히 잠재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아래 제조사안들이 1987년에 한국 전자 제품과 관련하여 조사되었다.

1) 337조 조사

가) Texas Instrument사 제조

1986년 2월 TI는 삼성반도체와 8개의 일본 전자회사를 337조 관련으로 제조하였다. 대부분의 일본 전자회사들은 제조 진행 과정에서 TI와 협의하여 해결하였으나 마지막으로 ITC는 삼성이 TI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 소송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었고 양측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안이었으나 TI는 이를 중요한 승리로 간주하였다.

ITC는 삼성에서 제조한 모든 DRAM과 삼성이 만든 DRAM을 포함한 모든 완제품의 수입 배제 명령을 대통령에게 권고하였다. TI와 삼성은 충분한 로열티 지불의 대가로 TI가 삼성에 DRAM 특허권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수입 배제 명령은 효력을 상실케 되었다.

나) 한국의 cellular 전화기에 대한 모토로라사의 제조

1987. 7. 8 모토로라사는 무선 전화기에 대하여 337 제조 피제조자 회사로는 현대전자, Novatel Communications Ltd, Astec International, Novatel Carcom, Novatel Communications Inc, Hickman Investments 등이다.

ITC에 의하여 조사 진행중이며 현재 소위 말하는 "Discovery phase"의 과정에 있다. 이 조사는 1988년에 종결될 것이나 이 보고서 후반부의 '88년 전망에 재론될 것이다.

다) EPROM에 관하여 337조 제조

피제조자측은 현대전자, 현대전자 America, Atmel, International Cosmos Technology, Cypress Electronics, All-American Semiconductor, Pacesetter Electronics이다. 이 제조는 현재 discovery phase에 있으며 1988년 전망에 조사

일정을 소개할 것이다.

2) 반덤핑 조사

가) Color TV 년례 재심

1987년 상무성은 1985. 4. 1부터 1986. 3. 31까지의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Color TV에 관련한 반덤핑 명령에 대한 연례 행정적 검토를 계속 시행하였다.

1987. 5. 11 상무성은 한국산 Color TV에 대하여 1.3%에서 4.49%까지의 덤핑 마진율을 공표한바 있으며 최종 판정은 1987년 11월중 예정되어 있으나 1988년 초까지 연기되었다. 추가로 '87년 5월 상무성은 1981. 4. 1부터 1987. 3. 31까지 수입 Color TV에 대한 연례 재심 실시를 발표하였다.

나) CPT 반덤핑 조사

1986. 11. 26 미국내 기업은 한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산 CPT에 대하여 반덤핑 제소. 1987. 6. 30 상무성은 한국산 CPT에 대하여 11.77%의 마진율을 발표하였으나 1987. 11. 11 발표된 최종 판정에서는 1.91%로 감축,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작은 마진율로 본 제소에 있어서 미국 기업에 손실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ITC는 12월 16일 미국내 기업에 피해 있음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산 CPT 수입에 있어 1.91%의 덤핑 마진이 부과될 것이다.

사.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자율규제

1987년 7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전자렌지, TV, VTR에 대하여 수출 자율규제를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것은 관련 제품의 미국내 수입 감소를 의미하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정부 관리는 수출 자율규제가 미국의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해도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 수출의 자제보다는 미국 전자제품의 한국내 수입 확대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수출 자율규제가 없었을 때보다 한국 수출이 의심할 바 없이 감소되더라도 이 조치는 미국 무역관리들의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가격 기준에 의한다는

선에서는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의 덤핑 방지에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3. 1988년 展望

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항 — 환율문제

아마도 1988년에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중요한 현안으로 한·미 정부간 협의시 주의제가 될 사안은 환율 문제가 될 것이다.

원화의 대 달러화 절상이 1985년 이후 15%정도 있어 왔지만 미국 재무성은 아직도 한국 원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태로 믿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원화의 추가 절상을 위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성이 공식적으로는 한국 원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1988년에 적어도 추가로 10%의 추가절상을 기대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원화 절상을 위하여 막후에서 비밀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많은 미국 관리들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런 사안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원화의 평가 절상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포괄적이다. 그것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뿐아니라 또한 미국내에서의 타수출국과의 경쟁을 매우 격화시킬 것이다.

나아가서 덤핑 비난을 피하기 위한 가격 조정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한국 기업들이 한국내에서나 미국 시장의 수출에 있어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면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덤핑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내에서의 덤핑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격수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대미 무역흑자 계속 확대 전망

미국 정부는 對韓貿易赤字가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으로 급격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몇몇 통상관리들은 私의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는 1988년에 120~140억弗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금액중 전자교역은 아마도 가장 빠

른 성장 부분이 될 것이다.

1988년에 미행정부나 의회로부터 한국의 무역 흑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우려가 점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에는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하여 3가지 思考의 主流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번째는 몇몇 사람들은 — 특히 의회내의 — 무역적자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은 일괄 통상 법안의 여러 조항에 — 특히 게파르트 수정안 —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는 주로 행정부쪽의 사람들의 생각은 바람직한 해결책은 수입쪽에 주안을 둘 뿐만 아니라 수출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 국내시장의 보다 폭넓은 개방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의 對韓 수출의 확대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무역 불균형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환율 같은 사안들을 균형 무역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8년에 우리는 이 세가지 견해들이 미국 무역정책 논의의 근간을 이룰 것이며 이중 하나만 단독으로 시도되기 보다는 세가지가 함께 고려될 경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미 행정부는 1988년이 선거의 해여서 상호 시장개방을 더욱 강하게 촉구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더욱 안정될 때까지 시장 개방 압력 노력은 기다리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1988년은 1987년에 있었던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보다 더욱 집중적인 노력이 있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다. 미 의회, 일괄통상법안 통과시킬 것이나 대통령의 서명은 의문시

미 의회 상하원의 리더들은 일괄통상법안을 1988년까지 완료할 의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목표는 가능할 것 같으며 의회가 적어도 1988년 봄까지 타협적인 통상법안을 성안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문

은 의회가 그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지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대통령이 기꺼이 서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다.

1987년말의 사건들은 — 특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 일괄통상법안의 가장 보호주의적 조항의 골격을 약간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본인이 보기로는 최종적인 의회안은 현재의 2개의 우려되는 의회안보다는 행정부안에 가까울 것으로 예견된다. 동시에 통상 사건 조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는 몇개의 다른 조항과 아울러 게파르트 조항에 대한 강한 지지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어려운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금 언급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행정부는 1988년 선거 정책으로부터 통상 현안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의회안을 받아들일 의사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한편 '88년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통상 문제에 관한 뚜렷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안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예측하기는 현재로서 시기상조다.

라. 한국 '88년에 GSP 졸업 예상

1988년초 행정부는 신흥공업국가 중 약 절반(6개국)을 GSP 면세 혜택으로부터 졸업시킬 것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될 것이다. 졸업에 대한 공식 발표는 일괄 통상 법안에 대한 의회의 논의 도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는 특정 국가를 지명함으로써 무차별이 못하다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몇 국가를 한 그룹으로 졸업시키는 일괄 결정 방법으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완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추가로 행정부는 졸업하게 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졸업의 불가피성을 수긍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약점은 최소화 될 것이다. GSP와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요소

는 졸업 일자이다. 1988년초 발표로 고려되고 있으나 1988년 후반이나 1989년도 생각될 수 있다.

만일 졸업일이 연기된다면, 무역 당국은 현재 걸려있는 개별 GSP 신청에 대하여 계속해서 결정할 것이다. 행정부 소식통은 사적으로 전자 분야에서 한국의 신청에 대하여 그 승산은 매우 힘들 것으로 시사하였다.

마, 미국, 세번분류시 "HS" 채택 예정

1987년에 미국은 Harmonized 세번 분류제도를 미국법으로 채택하는데 실패했지만, 의회는 1988년초에 다시 시도하리라 본다. 많은 관측통들은 새해초 HS를 일괄통상법안에서 분리하여 채택,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세관 업무의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 한국 전자제품에 보다 많은 제소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정 한국 전자제품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상치 않더라도 일반적인 통상 환경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하여 새로운 통상 제소를 부추길 수 있는 몇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1) 특정 제품의 한국 수출의 급신장
- 2) 원화의 평가절상(특히 한국 기업이 적절히 가격 조절을 하지 않을 때)
- 3) 1987년에 TI사의 337조 제소 성공으로 인한 미국 기업의 고무
- 4) 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더 당혹감을 느낄 수 있게 될 '88년의 미국 경제의 완만한 둔화

한국 기업은 세심한 계획과 대비로 — 특히 가격 문제에서의 — 덤핑 제소를 당할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밝혀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Color TV 반덤핑

3 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 1987. 11월 예정

이나 연기. '88년초 예상됨.

4 차 연례재심 ('86. 4. 1 ~ '87. 3. 31)
예비판정 : '88년 4, 5 월

나) Cellular Telephone 337조 조사

행정법률 심판관 청문회 : 1988. 2/8, 19

행정법률 심판관 판정 : 1988. 5. 12

ITC 최종 보고 : 1988. 8. 12

다) EPROM 337 조 조사

행정법률 심판관 청문회 : 1988. 6. 6

행정법률 심판관 판정 : 1988. 11. 16

ITC 최종 보고 : 1989. 3. 16

사. 쌍무 무역협상 압력 '88년 가중될 것임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간의 전자분야 쌍무 무역회담시 적어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압력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 i) 반도체,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에 대한 관세 부과, 통신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
- ii) 전자분야에서의 국산화 규정
- iii) 통신 서비스, VAN에 관한 제한요건
- iv) 지적소유권 문제

한국에서의 선거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휴지기를 주었으나 한국 국내 사정이 특히 국회의원 총선 이후 보다 확실해지면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적극적으로 재개할 것이다.

야이터 대사는 12월 16일 이제 한국이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므로 미국은 한미 통상 문제와 시장 개방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미국은 1988년 초에는 전자분야가 중요하긴 하나 전자분야보다는 타 분야들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1988년초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쇠고기, 토마토, 저작권 등이 될 것이다.

1988년 미국에서의 선거는 무역협상 의제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그 전망을 불확실하게 할 것이다. 야이터 대사의 12. 16 발언은 통상 압력이 더욱 증폭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